

청정 벌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 주민들 “결사 반대”

추동리 일대, 2년 전부터 폐석면·폐유 등 매립시설 추진 움직임 올 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주민들, 대책위 꾸리고 반대 집회 보성군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남아...허가, 쉽게 내주지 않는다”

지난 8일 오후께 찾은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한 반도 13개 정맥 중 하나인 내장산과 무등산 백운산에 이르는 호남정맥은 마치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다.

벌교읍에서 곡성방면으로 15번 국도를 타고 10분쯤 지났을까. 도로 오른쪽으로 벌거벗은 산세가 눈에 들어왔다. 굽이진 산맥 가운데 홀로 쇠빛 암석이 드러난 불췌사나운 모습이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해당 부지는 10여 년 남게 채석장으로 이용되며 산세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2년여 전 이곳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성군 벌교읍 주민들은 물론 순천지역 주민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교 벌교읍 추동리 내추마을 이장은 “몇 해 전부터 한 업체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정 보성 이미지는 물론,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주민들이 반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막과 새조개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읍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등을 처리하는 21만㎡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이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는데, ‘청정’ 이미지로 다양한 수산물로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촌계 주민들과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순천만-보성갯벌을 품은 보성군 순천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9월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처리 혹은 매립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A업체가 21만㎡ 부지에 매립하려는 지정폐기물의 양은 약 200만 t.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지정폐기물을 처리 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벌교읍 주민들은 변변한 산업단지조차 없는 보성군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일대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데다, 1급 농업용수인 추동저수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져 있는 것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환경오염은 식수원인 주암호의 시발점이며 당장 주민 삶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9월 허가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부지 인근 6km 내 주민 2000여명 가운데 무려 61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A업체가 앞서 환경당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의 이유라고 얘기했다.

A업체는 앞서 지난 2019년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사전입지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부지가 호남정맥 핵심구역(150m 이내)으로 개발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이후 부지를 수정해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완충구역(300m) 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A업체가 최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환경오염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미세먼지(Pm-2.5)의 경우 연간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적시됐으며, 사업완료 후 발생하는 지형변화지수가 ‘15’로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맥 완충구역 기준(0.5 이하)의 30배를 상회하고 있었다.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만 보더라도 갖은 결함을 가진 사업이다”라며 “A업체는 당장 매립장 계획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일대. (독자 이동교씨 제공)

지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보성군 환경지도계장은 “이제 막 초안이 제출됐을 뿐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항목별로 종합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

고 이 또한 환경당국으로부터 적절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에 권한을 가진 보성군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성=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외 이웃에 연탄 1200장...사랑의 온기 나눕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 디딤돌봉사회(회장 정연옥)는 지난 5일 여수시 서강동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1200장을 배달했다. 이날 배달된 연탄은 홀로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웅천 붕괴사고 원인규명 나선다

민간 전문가 7명 ‘지하사고조사위’ 구성...주변 건물 안전진단 등

여수시가 지난 2일 여수시 웅천동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2022년 11월 3일 6면)의 원인규명에 나선다.

여수시는 흙막이 붕괴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라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실종·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에서 기술적, 공법적 잘못은 없는지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부실시공 또는 위법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으로, 시는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인기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 사고원인을 다방면으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일까지 사고 현장에 레미콘 60대와 덤트럭 1700대 분량(약 2만2000루배)의 토사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달여간 그라우팅 공법 등을 활용해 지반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유입된 바닷물은 차수벽을 재설치한 후 배수하게 된다.

인근 상가와 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과 구조설계 검토도 진행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통과 위생 관리 국제 인증 제공인

순천시 수돗물이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 인증을 제공인 받았다.

순천시는 순천 수돗물이 지난날 21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해 위생안전 관리체

계를 통해 엄격하게 생산, 공급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ISO 22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 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순천시는 2020년 11월 전남 최초,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인증을 획득했다. 3년 인증 기간 동안 매년 엄격한 사후관리 심사로 순천시 수돗물이 안전한 식품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며, 이번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 인증 제공인으로 한 번 더 재확인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 가족이 먹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기쁘다”라면서, “앞으로 위생관리와 시설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50개 선정

갯김치·멸치·생선세트 등 특산품 구성...22~23일 공급업체 공모

여수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50개 품목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첫 답례품을 갯김치세트, 멸치세트, 생선세트 등 5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공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설문조사, 관계부서 추천 등 사전 선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성, 안정성, 기부 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내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공모 절차와 감치업체 15개소, 그 외 품목 3-5개소 등 구체적인 선정 방안 등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8-21일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품목, 가격, 구비서류 등을 공고하고, 22일-23일 이틀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여수시청 징수과(3층)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징수과(061-659-526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2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 필요한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우선 선정분야(마을기업 등)의 별도 모집을 진행해 지역 농특산품(갯, 썩, 옥수수, 방풍 등)을 가공·개발한 사회경제적기업의 참신한 제품도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인구 늘리려면 일자리 가장 중요”

인구구조 변화 인식개선 설문...도시 인프라 확충 요구도

광양시가 실시한 시민설문조사에서 광양시민들은 인구 증가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지난 10월 20-27일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 인식개선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내 14개 청년지원기관에 설문 조사지를 배부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결혼 ▲출산 ▲자녀 양육·다자녀가정 지원 ▲청년 ▲고령화 ▲인구 유입·정주여건 ▲인구 감소 대응 ▲홍보 등 8개 항목 21개 질문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

설문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공통되게 긍정(하는 게 좋다, 꼭 해야 한다) 의견이 62~63%로 부정 의견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관심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 역시 28~30%로 나타났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와, 자녀 양육 중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경제적 이유(42.8%)와, 일-양육 병행의 어려움(22.6%)이 높

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양육비(41.2%)와 자녀 교육 지원(21%), 보육·돌봄서비스(16.8%)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양시에 청년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46.5%)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즐길 거리를 마련(27.2%)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5060 은퇴세대의 광양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36.6%)와 재취업(36.1%)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양시 거주 이유와 인근 도시 진출 이유와 결과를 봤을 때 공통으로 직장(39.1%)이 주거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광양시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 확충(23.8%)과 여가·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19.3%) 등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 148%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 시·군 선정

구례군이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구례군은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추진에서 전체 체납액 8억 2700만 원 가운데 4억 29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 정리 목표액 2억 90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을 더 징수해 148%의 징수율을 올려 최우수기관 표창과 시상금 5000만 원을 받게됐다.

지방 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했던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는 체납액 징수율,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추락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군은 그동안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부동산·차량·급여·예금 압류 및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